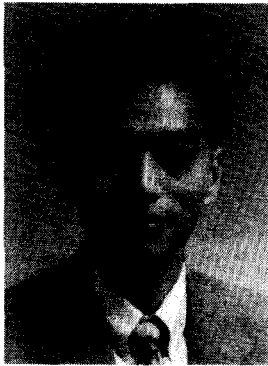


# 규제완화, 세계화 시대의 기업경영 전략



홍 성 종

〈한국경제연구원 선임연구원〉

■ 目 次 ■

- I. 머리말
- II. 세계화 시대의 선택 : 규제완화
  - 1. 우리 나라의 정부규제 수준
  - 2. 정부주도 규제완화정책의 한계
  - 3. 신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의 현황과 평가
  - 4.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관료의 속성
- III. 기업경영 혁신 전략
  - 1.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 2. 국가경쟁력의 현주소
  - 3. 개방화시대의 기업경영 전략
- IV. 결 론

## I. 머리말

우리경제가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의 한계를 인식한 것은 그리 오래된 일은 아니다. 경제규모의 급속한 발전과 개방경제의 진전에 따라 산업기술정책을 비롯하여 공정거래정책, 금융정책 등의 변화와 더불어 정부역할의 기능조정이 요구되고 민간경제의 비중이 확대되게 되었다. 정부규제 도입 당시의 상황이 변화하여 당초 공익추구 목적 하에 도입된 규제가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국민 경제활동을 오히려 가로막은 장애요인으로 등장하게 된 것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규제완화정책을 주요정책목표로 하여 대대적인 제도개선 노력을 경주해왔다.

그러나 흔히 무한경쟁시대를 맞이하여 국가경쟁력을 높인다는 취지 하에 선택된 최근 일련의 규제완화정책이 과연 바람직한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매우 회의적이다. 이른바 '규제의 역설' (The paradox of regulation)이 만연해지고 있다. 규제완화가 사회전반의 공정한 경쟁을 높여가기보다 오히려 특정집단의 수요를 쫓아 포획(Capture)되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규제완화의 목표면에서도 과도한 정부개입을 줄여 시장기능을 회복시킨다는 취지보다 행정절차의 간소화, 서류간소화 등 단순한 행정서비스 개선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점이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규제완화에 대한 인식은 상당한 오류를 낳고 있다. 즉, 일반기업은 대부분 규제완화로 인한 '수혜자'라는 인식이 그것이다. 엄밀한 의미에서 규제완화의 가장 큰 핵심은 자유시장, 자유경쟁, 자유기업을 가로막는 구속을 벗겨 내는 것이다. 단순한 행정절차 완화나 서류간소화, 처리기간 연장 등 행정민원 서비스의 개선은 마땅히 실행했어야 정부 본연업무를 바로 회복하는데 지나지 않는다.

오늘날의 기업은 그 어느 때보다 '경쟁'이라는 고달픈 대가를 치르며 기업을 유지·발전시

켜가고 있다. '경쟁'이야말로 시장경제의 핵심이 되며, 경쟁의 결과로 인한 혜택이 국민일반의 공익이다. 규제완화로 인한 경제전반의 경쟁압력으로 오히려 기업은 많은 비용을 치러야 한다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 과거 진입제한으로 보호받던 자신의 사업영역이 경쟁압력을 받게 되고, 가격규제 하에서 보호받던 기업들은 시장상황에 대한 대응이 무엇보다 민감하게 된다는 사실을 규제완화시대의 도래와 함께 인식해야 한다.

이 글은 WTO체제의 출범 등 무한경쟁시대로의 진입에 따른 경쟁압력 환경하의 기업의 생존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제2장에서는 세계화로 불리는 개방경제의 파고에 맞서기 위해 추진중인 규제완화정책에 대한 전반적인 평가와 그 과제를 논의하고, 규제정책과 규제완화정책을 동시에 추진하는 관료기구의 속성에 대해 고찰한다. 제3장에서는 대외적인 개방화와 대내적인 규제완화의 혼돈 속에서 생존하기 위한 기업의 전략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 세계화 시대의 선택 : 규제완화

### 1. 우리 나라의 정부규제 수준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과 정부개입 혹은 정부규제간의 올바른 선택과 조화는 우리의 시장경제체제의 성공여부를 결정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우리 나라는 시장경제체제를 따르고 있으며 지난 수십년 동안 민간의 창의와 자율에 기초한 시장자율화 혹은 시장기능의 제고는 항상 국가적으로 중요한 경제목표가 되어왔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에는 민간의 경험과 능력이 부족하여 시장이 독자적인 기능을 발휘할 수 없다는 이유로 국가경제운동을 시장의 자율적인 기능보다는 항상 정부의 강력한 계획과 간섭에 의존해 왔다.

그러나 최근 우리 경제는 규모확대와 개방화 등에 따른 환경의 변화로 인해 60년대 이후부터

계속되어온 정부주도형 경제운용을 탈피하려는 노력을 시도하고 있다. 즉, 시장실패를 치유하고 국가의 중요한 경제목표를 달성한다는 이유로 정당화되어 왔던 정부의 시장개입은 오히려 경제의 활력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장애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점을 인정하게 된 것이다.

실제로 우리 나라의 정부규제에 대해 규제를 집행하고 있는 공무원과 피규제자인 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인식조사를 통해서 규제수준이 심각함을 알 수 있다. 규제집행자인 공무원 스스로도 69.2%가 우리 나라의 정부규제가 심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있다. 기업인들 역시 70.4%가 정부규제가 심하다고 밝히고 있다(표 1참조).

<표 1> 우리 나라 정부규제의 수준·강도

단위 : %

구 분	기업인	공무원
지나치게 심하다	5.2	6.4
대체로 심한 편이다	65.2	62.8
적당하다	15.6	14.8
대체로 약한 편이다	7.8	10.4
지나치게 약하다	1.2	0.2
잘 모르겠다	5.0	5.4

자료: 김재홍·홍성중, 『정부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1993. 11

<표 2> 정부규제로 인한 기업의 손실 정도

단위 : %

구 분	기업인	공무원
경제적 손실을 입고 있음	57.4	51.6
손실이나 이익없음	19.8	21.6
경제적 이익을 입고 있음	22.2	26.4
기타	0.2	0.2
무응답	0.4	0.2

자료: 김재홍·홍성중, 『정부규제의 평가 및 개선방안』, 1993. 11

규제의 순효과 면에서도 규제로 인해 경제적 이익을 보는 경우보다 손실을 보는 경우 거의 2배에 달한다. 기업인의 57.4%와 공무원의 51.6%가 규제로 인해 경제적 손실을 보고 있다고 생각하는 반면, 이익을 얻고 있는 경우는 각각 22.2%와 26.6%에 불과하다(표 2참조).

## 2. 정부주도 규제완화정책의 한계

우리 나라의 규제완화정책의 시발은 1982년 ‘성장발전저해요인개선위원회’ 서부터이다. 이후 90년대에 이르기까지 행정규제완화위원회를 비롯한 각종 위원회를 구성하여 국민생활과 경제활동부문에 불합리한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였다. 그러나 80년대 이후 신정부에 이르기까지 규제완화작업에 대한 평가는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긍정적이지 못하다.<sup>1)</sup>

첫째, 규제완화를 전반적인 규제개혁 구도 하에 추진하지 아니하고, 문제시되는 국부적 영역에서 머물렀다는 점이다. 또한, 규제완화에 대한 문제인식이 피상적이었으며, 규제완화가 주로 관련산업의 요청에 따른 관료의 대응형태를 띠어 본질적인 한계를 내포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80년대 초반이후 10년동안의 규제완화 정책은 커다란 성과를 보지 못했다.

둘째, 규제의 절대량이 아직 방대하여 지속적인 완화 노력이 이어져야한다는 점 이외에 경제의 본질적인 규제인 진입, 가격에 대한 규제가 제외되었다는 점이다. 이처럼 진입, 가격규제가 제대로 완화되지 않았던 이유는 규제완화가 득권자의 보호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각종 신규진입 규제들이 국가경쟁력을 강화한다든지 과당경쟁을 방지하거나 산업의 건전육성을 위한다는 이유하에 규제완화 논의의 대상에서 빠져 있다.<sup>2)</sup>

셋째, 핵심적인 규제가 외국에 비해 지나치게 높은 근본원인은 국가의 중요정책 목표를 명분으로 자율보다는 통제위주로 경제운동을 하고 있고, 규제 중 중요부분을 정책적 규제성역으로 간주하여 이에 대한 개선은 규제완화에서 제외시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평가된다.<sup>3)</sup>

넷째, 규제를 만든 관료 자신이 규제를 완화하는데는 소극적일 수 밖에 없다. 따라서 규제완화를 하기는 했지만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인 규제완화는 미흡하고, 기업경영에 영향을 미치는 핵심적인 규제는 그대로 있다. 규제완화작업에 민간이 참여하고는 있으나 실질적으로는 행정부 주도로 작업이 진행되어 왔다. 규제완화를 위한 위원회가 양산되었으나 어느 하나도 확실하게 규제를 완화할 수 있는 전문성, 중립성,

1) 신정부 이후 규제완화 정책을 추진기구 중심으로 평가한 자료는 김일중·홍성중, 『한국의 규제완화 추진체계』(1994)를 참조할 수 있으며,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와 행정채신위원회의 규제완화 실적을 중심으로 한 사안별 평가는 이승철·한선옥,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평가』(1995)를 참조할 수 있다.

2) 최근의 『정부의 규제완화 정책 평가』(이승철·한선옥, 1995)는 정부규제 정책의 실패요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첫째, 규제가 많이 완화되었지만 규제완화사안이 전체 규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극히 적다는 점과 둘째, 규제완화의 본질은 경쟁촉진이므로 진입이나 가격 등에 대한 규제완화가 정책의 핵심이 되어야 하나 규제완화의 대부분이 이러한 경제적 규제의 핵심적인 내용을 완화하기보다는 기업활동의 애로요인을 해소하는 차원의 규제완화가 많다. 셋째, 규제완화의 핵심은 규제의 절대적인 수준을 낮추는 데 있다. 그러나 규제완화작업의 많은 부분이 규제절차를 간소화한다든지, 규제집행권을 민간단체나 지방정부에 위임·위탁하는 경우가 많아 규제수준 자체의 변화와는 무관한 측면이 있다. 넷째, 규제완화작업에서 가장 걸림돌이 되는 것은 정책과 규제의 혼돈이다. 다섯째, 규제를 완화하는 방법중 가장 중요한 것은 규제완화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규제를 확실하게 완화해야 한다는 점이다. 여섯째, 규제제도의 개선방법중 가장 효율적인 것은 규제방법을 사전적 규제에서 사후적 규제로 전환하고 사후적 규제의 집행을 철저히 하는 것이다.

3) 정책적 성역으로는 통화관리차원의 금융규제, 물가안정차원의 가격규제, 세수확보 차원의 각종 주류산업 규제 등이 해당된다. 규제당국은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합리성에 대한 분석이 없다. 그 결과 근본적인 개선 안보다는 지엽적인 것만을 개선하는 식으로 규제완화가 이루어졌다는 평가이다(김재홍외, 『정책적 규제비판 : 규제완화의 성역개방을 위하여』, 한국경제연구원, 1994 참조).

그리고 추진력을 갖지 못하고 있다.

### 3. 신정부의 규제완화 정책의 현황과 평가

경제계와 국민일반의 끊임없는 규제완화의 요구에 따라 '93년에 출범한 신정부는 '작고 효율적인 정부'를 선거공약으로 삼아 규제완화를 가장 중요한 정부정책의 하나로 채택하였다. 이에 따라 각종 위원회가 설치되었고, 대통령, 언론, 기업 그리고 국민의 지대한 관심 속에 규제완화 작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게 되었다. 신정부의 규제완화작업은 각종 위원회 구성한 후 여러 경로를 통해 규제완화 대상사안을 발굴하여 이를 개선하여 왔다. 신정부의 규제완화작업은 그 규모면에서 수천 건에 달하고 있으며, 범정부 차원에서 강력하게 추진되어 왔다.

그러나 규제완화 사안을 분석해보면 그 규모의 방대함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근본적인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 신정부 규제완화의 핵심기구인 행정쇄신위원회(대통령 직속기구)와 경제행정규제완화위원회(구 경제기획원 소속)의 규제완화 추진실적을 평가한 결과, 총 2,659건 중에서 1차산업은 7.7%(204건), 제조업 13.8%(368건), 건설업 7.9%(209건), 금융·보험업 3.1%(83건), 기타서비스업 33.3%(885건), 공공행정 11.7%(310건), 국민생활 7.9%(210건)를 각각 차지하고 있다.<sup>4)</sup>

이같은 자료는 제조업에 대한 규제완화는 13.8%에 불과하고 금융·보험업에 대한 규제완

화도 불과 3.1%에 지나지 않음을 보여주고 있다. 기업이 규제완화를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은 제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매우 미흡하게 추진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규제완화의 상당부분이 서비스업에 대해서 이루어졌고 기업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제조업에 대해서는 별로 이루어지지 않아 기업들의 불만을 낳게 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금융·보험업 등 금융산업에 대한 규제완화가 전체의 3.1%에 불과하다는 것은 금융규제의 완화가 타부분에 비해 뒤떨어져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표 3참조).

또한, 규제단계별로 기업활동과 관련된 사안만 살펴보면, 진입·퇴출단계의 규제완화는 기업활동관련 규제완화의 23.9%(502건), 생산 및 영업활동단계는 32.1%(674건), 토지·입지·건축단계는 18.4%(387건)로 나타난 반면, 자금조달·운용단계에서의 규제완화는 6.2%(130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기업활동 애로요인으로 지적되어 온 생산규제와 토지규제의 완화는 비교적 잘 이루어진 반면 자금조달·운용관련 규제완화는 매우 미흡하게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다. 가격규제의 완화는 생산 및 영업활동단계의 규제완화로 분류되어 분석되었는데, 가격규제의 완화는 2.0%(43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신정부의 규제완화정책은 수천 건에 달하는 규제완화 사안에도 불구하고 획기적인 규제완화가 없었다는 사실은 규제완화정책이 실적 위주의 정책이었다는 결과를 반증하고 있

<표 3>

산업별 규제완화 현황

단위 : %

1차산업	제조업	건설업	금융 보험업	기타 서비스업	공공행정	산업일반	국민생활 관련	합 계
7.7(204)	13.8(368)	7.9(209)	3.1(83)	33.3(885)	11.7(310)	14.7(390)	7.9(210)	100.0(2,659)

\* ( ) 안의 수치는 해당사안의 건수

4) 이승철·한선옥, 『규제완화 정책 평가』, 한국경제연구원(1995) 참조

다. 따라서 수천건의 규제완화정책을 추진했다는 정부의 홍보는 규제완화정책의 성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규제완화정책의 실패를 의미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결국 규제완화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방법은 정책적 성역을 재검토하고, 규제완화체계를 재정비하며, 규제완화시책 하나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규제완화의 내용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으로 결론지을 수 있다.

#### 4.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관료의 속성

규제를 도입하여 집행하거나 또는 규제완화작업의 일선에 나서고 있는 관료조직의 장(長)인 직업공무원이 갖는 속성을 이해할 필요가 있다.

첫째, 예산(또는 업무)극대화 모양이다. 관료기구의 장들은 보통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목적(즉 월급, 권력, 명성, 부수입, 여유 등)을 갖고 살아간다. 그런데 관료기구내에서는 이러한 목적들의 대부분이 해당 기구의 예산(또는 업무)규모에 정비례하기 때문에 예산을 극대화하려는 인센티브가 강하다는 학설이다.

둘째, 재량권극대화 모형이다. 예산의 절대적인 크기보다는 수입에서 실제비용을 차감한 부분에 더욱 관심을 갖는다는 학설이다. 왜냐하면 이 차감분이 바로 관료기구 장들의 재량권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관료기구내 다양한 직위에 종사하는 관료들(정치적으로 임명된 장들, 고급공무원들, 하급 일선공무원들)의 인센티브가 제각기 다를 수 있다. 규제완화를 집행하는데 있어 관료형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선 이들의 다양한 인센티브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정책 및 각종 제도가 바뀔 때에는 이들 이해관계의 역학에 따라 그 방향이 결정되기 쉽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sup>5)</sup>

관료제를 경제학적으로 설명하는 이상과 같은 모형들을 사용하면 흔히 지적되고 있는 관료들의 냉담한, 복지부동, 비효율성, 비생산성 등을 체계 있게 설명할 수 있다. 위 모형들에서는 관료들이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국민을 위해 일하려는 ‘좋은’ 사람들도 분명히 있겠으나, 다만 그들도 사익(私益)을 생각지 않을 수 없는 ‘보통’ 사람들이라는 의미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익추구의 보통 사람들이 시장과 다른 환경에서 운영하는 관료기구는 어쩔 수 없이 비효율적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속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sup>6)</sup>

이 때문에 정부조직의 내부경쟁이 미약하여 정부정책에 나타나는 제반문제가 수정되기 보다는 영구화되는 경향이 강하며, 시장개방에 대한 주체적인 논리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기본적으로 정부 각부처간의 상호 견제기능이 제대로 실행되지 않음으로써 비합리적인 제도의 수립이 허용되고 있는 것이 기본적인 문제점이다. 원래 취지와는 괴리가 생기도록 정책이 집행되어도 그것을 제어하는 기능이 충분히 작동하지 않고 있다. 정부부문에서 창출해 내는 법과 제도에 대한 국민의 신뢰성이 낮아지고 따라서 구속력이 저하되고 있다.

행정조직 내에도 경쟁이 심화되고 민간과의 인사교류가 활성화되면 자연히 관료 스스로 해야 할 일과 해서는 안되는 일에 대한 기준을 분명히 하고 이를 세계화 추진의 성과에 따라 판단할 것이다. 조직의 축소는 물론 권한과 사업의 민간이양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행정에 기업경영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가장 효과적인 두 가지 방법은 정부기능의 분권화(Decentralization)를 통한 경쟁체제의 지속적인 확립과 정부가 수행하는 업무의 총량에 직접적인 제한조항을 두는 것이다.<sup>7)</sup>

5) 예를 들면, 장관은 단기간에 치적하려하고, 하급공무원은 가능한 변화를 싫어한다는 사실이다.

6) Bruce Benson (1995)

### Ⅲ. 기업경영 혁신 전략

#### 1. 기업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

세계경제는 지각변동이 계속되고 있다. 세계화(Globalization)로 지칭되는 환경의 변화는 세계를 하나의 활동무대로 보고 세계의 중심에 서야 하는 새로운 도전을 요구하고 있다. 기업의 세계화 전략은 세계의 시장, 자본, 기술, 자원을 결합하여 새로운 상품을 개발, 생산, 판매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경제의 국제화는 국제사회에서 통용되고 있는 시장경제 원칙에 의해 받아들여지는 공통의 게임 규칙(Common rule game)을 우리나라의 경제관련 법, 제도, 관행으로 받아들여 어느 외국인이나 외국기업도 경제활동에 관한 한 국적에 따른 차별을 받지 않고 우리의 경제자원을 활용할 자유를 보장받는 환경을 구축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계화는 다른 각도에서의 고찰이 필요하다. 과거 냉전체제의 축이 되었던 동서구도가 해체되어 각국의 역할 변화가 진행중이다. 또한, 세계경제권의 판도인 남북구도 역시 변화하여 경제주도권이 북미에서 아시아·태평양 등 타지역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아시아 지역에서는 중국경제가 급속도로 부상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잉태된 세계화는 국경없는 단일시장의 개념과는 다르다. 과거의 국제화 개념은 대형화, 중앙집권화, 집단화인 반면에 근래의 상황은 흔히 '세계화 패러독스(Global paradox)'로 지칭된다. 즉, 세계경제 규모의 전문화, 기업규모의 소규모화, 통합보다는 분산경영, 중앙집권보다는 지방분산, 획일주의보다는 다원주의의 경향이 강하다.

우리 기업의 운명은 대내적으로는 규제완화, 소비자의 변화, 정부기능의 변화 그리고 지방화에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 대외적으로

는 WTO 체제출범, 블럭화, 대규모 정보화에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대처하는가에 달려있다.

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속히 변화할 때 기업들은 체계적이고 조직적인 기업전략이 필요하다. 기업전략은 장기적인 기업의 변신방향을 제시하는데 비중이 주어져야 한다. 이는 단순한 슬로건이나 이념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세부적인 사항을 현실의 움직임에 맞추어 유연하게 조정해 나가는 설계도이다.

그동안 우리 기업은 기업들의 외형성장에 큰 비중을 두었다. 이를 통해 국부의 증대나 고용기회의 확대라는 면에서 본다면 기업의 양적 성장이 경제에 기여한 바를 결코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국제화의 진전에 따라 과거 산업보호 육성정책이나 차별적 정책은 더이상 통용되기 어렵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와 함께 기업을 둘러싼 여러 환경은 우리 기업에게 상당한 부담을 안겨주고 있다.

먼저 기업을 둘러싼 환경은 환경의 변화에 발맞추어 변화하지 못하고 있다. 즉, 개방화 시대에 맞지 않는 각종 제도가 산적해 있다. 제도의 도입목적이 상실된 경우에도 행정기구와 인력의 개편이 어려워 제도를 유지시키고 있다.

아울러, 왕성한 경제활동은 체계적인 정보의 수입, 관리, 이용체계에 의해 뒷받침되어야만 경제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으나 우리의 정보관리 체계는 전문적 분석이 뒤지고 홍보성이 강한 대중매체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 해외 각국의 경제정보는 기관별로 산발적으로 수집, 활용되어 체계적 분석과 효율적 활용이 미흡하다.

#### 2. 국가경쟁력의 현주소

각 개별기업의 경쟁력이 모여 한 나라의 국가경쟁력을 이룬다. 한 국가의 경제주체들이 경쟁대상 국가에 비해 지속적으로 경쟁우위의 위치에 있기때문에 유·무형의 자원을 축적하고, 축

7) 예를 들면, 정부지출 GNP의 20%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다.

적된 자원을 기업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와 관행을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사회전체의 역량이 복합적으로 모여서 국가경쟁력이 결정된다고 볼 수 있다.

국가경쟁력의 형성과정은 경쟁력 창출자원, 경제주체의 효율적 의사결정을 가능하게 한 제도 및 관행의 효율성, 그리고 국가 특유의 노사관계 및 사회응집력과 같은 동태적 요소 등 3가지 요인으로 설명된다(표 4참조).

#### △ 국가경쟁력의 형성과정

국가경쟁력 = 창출자원(I) × 경제주체 및 제도의 효율성(E) × 동태적 요소(D)

경제력의 국가간 격차는 과거에는 자유무역과 투자자유화의 진전에 따라 결정되었으나 이제는 이러한 눈에 보이는 경제규모의 격차보다는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정보력의 격차에 의해 결정된다. 경제력의 국가간 격차해소는 기업의 국제적 이동과 기업활동의 세계화에 의해 가능하며, 이는 이미 선진국에서 역사적으로 입증된 바 있다. 2차대전후 유럽의 급속한 재건은 미국 자본과 다국적기업의 유럽진출에 의해 가능했으며, 70년대 독일과 일본경제의 급성장은 지식, 기

술의 확산과 생산기술혁신에 의해 가능했다. 80년대 동아시아 성장경제권의 부상은 선진국의 신보호주의 경향에 대응하려는 일본의 글로벌생산기지 구축과 아시아 네마리 용의 세계시장을 겨냥한 왕성한 기업투자에 힘입은 것이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세계화로 불리는 국가경쟁력 수준은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과 세계경제포럼(WEF)의 '1995년 국가경쟁력 보고서'는 조사대상 48개국 중 우리나라의 경쟁력수준을 24위로 평가하고 있으며, 신흥공업국 중에서는 가장 경쟁력이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부문별로는 대외폐쇄성이 3위, 정부의 기업간섭수준은 7위를 기록하고 있다.

### 3. 개방화 시대의 기업경영 전략

대내의 경쟁제고의 환경 하에서 우리기업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서있다. 기업을 유지·성장시키 위한 보다 치밀하고 창조적인 전략이 요구되는 때이다. 이제는 기업도 국내시장 개방의 확대를 받아들이고 국내진출 외국기업과 국내시장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면서 실력을 갖추어 제 3국으로 공동진출하며, 기술개방을 위한 전략적

〈표4〉

국가경쟁력 결정요인

구 분		I	E	D	기여도(순위)
경제운영 성과	국내 경쟁력		△	○	9.3%(7)
	국제화 수준		△	◎	11.5%(3)
프로세서 효율성	정부 행정		◎	○	10.0%(5)
	기업 경영		◎	△	12.4%(1)
투자역량	금융 환경	◎			11.9%(2)
	인프라스트럭처	◎			9.5%(6)
학습역량	과학·기술	○		◎	8.1%(9)
	인적 자본	◎	○		9.0%(8)
사회역량	노사관계		○	◎	10.4%(4)
	사회적응집력		○	◎	7.9%(10)

주 : ◎는 관련성의 정도가 매우 높음, ○는 대체로 높음, △는 보통임.

자료 : 한국경제연구원,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구상』, 1995

제휴도 강화하고 신제품, 신소재, 신공정개발에 공동 참여하여 협력의 범위를 넓혀가야 한다.

우리 기업은 GATT체제에서 이룬 수출성공의 경험을 이제는 새로운 WTO체제아래서 해외진출 성공의 전략으로 승화시켜야 하며, 이를 위해 우선 선진기업을 국내시장으로 적극 끌어들이 경쟁하면서 배우고 협력하면서 기회를 찾는 세계화 전략을 정부의 지원 없이 실천해 나가야 한다.

첫째, 비교우위의 기존 사업분야를 철저히 강화하는 것이다. 기업이 가지고 있는 경영자원의 상당부분을 비교우위가 있는 기존 사업분야에 집중투자 하여야 한다.

둘째, 성장분야를 선택하여 과감히 변신해야 한다. 기본 사업분야가 성숙기에 있을 때야말로 신규사업 진출을 위한 여력이 가장 충분할 때이다. 기업의 성쇠는 대부분이 이시점에서 결정된다. 신규사업에 대한 변신의 시점과 방향에 따라 기업의 운명이 좌우되는 것이다.

셋째, 종업원의 창의력을 제고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 우리 나라 기업들은 극심한 경영환경의 변화에 직면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큰 변화는 고임금시대가 정착됨에 따라 그동안 주로 가격경쟁력에 기반을 두어왔던 수출주력상품의 경쟁력이 하락했다는 점이다. 고임금의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우리 기업은 비가격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러나 단기간에 비가격경쟁력의 핵심인 기술력과 품질력을 급속히 향상시키는데는 어려움이 많다. 단기간으로는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새로운 경험을 가진 인력을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투입해야 한다.

#### IV. 결론

세계경제질서 형성에 우리가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우리의 목소리를 갖기 위해서는 국내시장이 선진국 수준으로 개방되고 국내제도가 국제

규범에 맞게 국익을 극대화하고 산업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지되 경쟁력 논리를 따라야 한다.

지금까지의 개방추진은 개방의 영향이 적은 부분을 우선적으로 하는 '형평논리'를 따라왔기 때문에 개방이 주는 경제적 이익은 미미했고 보호된 국내산업의 경쟁력은 계속 약화되어 왔다. 이는 대외정책의 추진에 경제논리와 시장원칙보다는 이해집단에 의해 원칙이 무시되는 정치논리를 따라왔기 때문이다.

과거 경제개발시대에 비해 1980년대 이후 경제규모가 확대되고 민간부문의 자율적 선택에 의한 시장의 조정기능이 크게 신장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민간부문의 자율성을 저해하는 법과 제도가 많이 남아있다. 그러나 개방화의 진전에 따라 규제완화의 방향은 결국 산업전반의 경쟁을 제고시키는 방향으로 결론 내려질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과거 정부주도의 경제개발시대에 사용되었던 진입규제, 금융규제 등이 개선될 것이며, 급변하는 국내외 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한 정부의 참여 및 개입에 대한 우선 순위의 재정립이 이루어질 것이다.

기업세계화 전략의 핵심은 국제경쟁을 바탕으로 한 개방형 생산구조 고도화와 국제분업체제의 구축에 있다. 세계화 추세 속에서 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시장상황과 경쟁요소 변화에 관한 정보활용의 기반을 구축하고, 기업간 기술협력과 선진기업과의 전략적 제휴가 확대되도록 전략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

#### < 참고문헌 >

1. 한국경제연구원, 『국가경쟁력강화를 위한 기본 구상』, 1995
2. 김일중·홍성중, 『한국의 규제완화 추진체계 : 본질, 성과 및 개편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4
3. 김재홍·홍성중, 『정부규제의 문제점과 개



- 선방안』, 한국경제연구원, 1993
4. 홍성종외, 『정책적 규제비판 : 규제완화의  
성역개방을 위하여』, 한국경제연구원, 1994
  5. 이승철 · 한선옥, 『규제완화 정책 평가』, 한  
국경제연구원, 1995
  6. 김일중, “한국규제 완화정책의 성과와 진  
로”, 자유주의 국제심포지엄자료, 한국경제  
연구원, 1995
  7. Bruce Benson, “Understanding Bureau-  
cratic Behavior : Implication for Korea”,  
1995

完名美節, 不宜獨任. 分些與人, 可以遠害全身. 辱行汚名, 不宜全推.  
引些歸己, 可以韜光養德.

좋은 이름과 아름다운 절의는 혼자서만 차지하지 말라.  
조금은 나누어 남에게도 주어야 해를 멀리하고 몸을 보전할 수 있다.  
욕된 행위와 더러운 이름은 남에게만 미루지 말라.  
조금은 끌어다 나에게도 돌려야 빛을 감추고 덕을 쌓을 수 있다.

- 菜根譚중에서 -